

9.11 테러 이후 국제방사성물질 규제 동향 분석  
A Study on the Trend of International Radioactive Material Regulation  
Since the terrorist attacks of September 11, 2001

류재수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약

9.11 테러 이후 알 카에다 및 기타 테러단체들은 방사능폭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사성물질을 획득하려고 노력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실제 방사능폭탄 제조와 관련된 문서가 발견되었다. 이에 미국을 중심으로하는 국제사회는 방사능테러에 대비한 방사선규제 및 방사선원들의 보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방사능테러의 가능성 및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방사능확산장치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의 방사선규제 및 보안 개선에 대한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장관의 告示 및 KINS 기술기준의 법적 지위  
Legal Status of Minister's Notices and Technology Standards of  
"Korea Institute of Nuclear Safety"(KINS) to Regulate Nuclear Safety

정상기, 정명도, 김상원, 장군현, 오병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전시 유성구 구성동 19

요약

현행 원자력안전법령체계 가운데 특히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와 KINS의 장이 제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 등의 법적 성질과 효력이 문제되는 바, 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는 비록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판례에서 확립된 이론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며, 또한 KINS의 장이 제정한 수탁업무처리규정(개별규정)과 지침서도 역시 일종의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법규성이 부정된다 하겠으나 그것이 소위 규범구체화규칙의 이론에 의하여 법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